

##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박형중(통일연구원)

### 국문요약

통일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분야 연구의 집합체이다. 통일학은 그 주요 초점, 주제구성, 주제사이의 위계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와 같은 성격의 주제를 다루는 데서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연구, 불확실성 처리, 상호 대립적 인식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 글은 통일양상과 통일학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주제어: 통일학, 시나리오 방법론, 미래연구, 대북정책, 통일정책, 남북관계, 남남갈등

통일학은 일반적으로 정태적으로 개념정의된다. 즉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분야 연구의 집합체라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각종 학문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일관하는 '방법과 자료'를 논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그런데 집합체로서의 통일학은 현실에서 보면 동태적으로 변화하면서 주요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을 바꾸어왔다. 변화 추동 주요 원인은 통일학의 주요 내용이 수많은 불확실성과 상이한 인식을 포괄하는 미래연구라

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통일학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 주제 및 학문 요소와 함께, 시기마다 특정 시기 통일학의 주요 성격을 규정해주는 지배적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에 의해 규정되는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주제와 학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통일학을 그 주요 초점, 주제구성, 주제사이의 위계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대상을 어떻게 연구하며 이해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론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소개하며 응용해보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인데, 이의 근본 특징은 어떤 주제의 미래과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며, 복수의 가능한 미래를 상정하면서, 현재의 인식과 전략을 그러한 상이한 미래 별로 적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시나리오 기법은 상이한 견해를 갖는 여러 행위 주체사이에 생산적인 전략적 대화를 축성하고, 새로운 통찰과 합의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 글의 1장은 '통일학'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고 또한 변화해 왔는가를 살핀다. 2장은 통일학의 세 가지 특징을 다룬다. 이는 미래연구라는 것, 불확실성을 내포한 문제라는 것, 인식 갈등이 심한 문제라는 것이다. 3장은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시나리오 기법에 의거, '통일'의 가능한 미래 과정을 4가지로 유형화한다. 5장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 기법과 통일 시나리오가 통일학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 I. 통일학의 개념과 주제 변천의 역사

통일학에 대한 개념정의로 두 가지가 발견된다. 그 하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간접적 개념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원 통일학 협동과정의 개념정의이다. 서울대 통일연구소는, ‘설립목적’으로 “통일을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통합적, 학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지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고 제시한다.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은, “이제 통일은 막연한 기대와 전망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통일학이란 “바로 통일과 관련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현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학문”<sup>2)</sup>으로 개념정의한다.

두 기관의 개념정의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 접근을 인정하는 한편, 학제 간 종합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통일을 ‘통일을 대비하는 지적 역량 축적’이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비해, 연세대 통일학 협동과정은 ‘효과적인 통일전략 연구’라는 점에서 보다 정책지향성을 강조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개념이 규정하는 연구영역과 방향을 보면, 첫째, 다양한 남북한의 통합과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둘째, 통일 후 사회 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며, 셋째, 한반도 상황을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넷째,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심리적 차원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통일한국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학술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sup> 이와 같은 연구영역 규정과 방향은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2003년 이후 수행해 온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지원하에 포괄된 여러 연구주제에 그대로 드러난다. 자

1) <http://tongil.snu.ac.kr/info/object.php>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2) <http://suny.yonsei.ac.kr/~ikus/main.html>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3) <http://tongil.snu.ac.kr/info/object.php>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연·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연구를 포함, 크게 보아 ‘남북한통합’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넓은 영역의 주제가 ‘통일학 기초연구사업’의 지원대상이었다.<sup>4)</sup>

‘통일학’을 이와 같이 개념정의하면, 통일학의 역사는 남북 분단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통일’을 둘러싼 주제와 논의 구조, 주체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된 두 개념에는 ‘통일학’과 관련하여, 변화하지 않은 것과 변화한 것이 함께 결합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통일학’ 전문연구조직의 효시는 1969년 설립된 국토통일원이라 할 수 있다. 국토통일원의 직무는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 관장”으로 되어 있었다.<sup>5)</sup> 국토통일원은 1980년 당시 안기부로 부터 남북대화사무국을 인수받기까지, 주 기능이 연구·홍보·교육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정책개발, 조사연구, 통일교육, 통일홍보, 자료관리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과제는, 통일정책, 남북대화, 주변 상황, 북한실태, 남북한비교, 이질화실태, 분단국 및 공산권, 통일문제여론조사 등이었다.<sup>6)</sup>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여러 변화에 의해, ‘통일학’의 주제구성과 문제의식은 현재의 그것들과 유사한 양태로 발전하였다. ‘통일학’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들로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이후 개시된 남북교류협력, 독일통일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 경제난의 급격한 악화와 탈북

4) <http://tongil.snu.ac.kr/business/basic.php>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5) 「정부조직법」 제26조,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15년 약사(1969년~1984년)』 (서울: 국토통일원, 1984), p. 11.

6)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15년 약사(1969년~1984년)』, pp. 49~278.

자 증가,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 대두,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적 추진 등이다.<sup>7)</sup> 특히 1994~1997년 동안 ‘북한붕괴임박’론이 우세한 가운데 ‘통일학’은 그 영향권하에 들어갔다. 이 시기 동안 핵심연구주제는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한 연구,<sup>8)</sup> 북한 붕괴 후 북한 관리 및 조속한 흡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체제 수립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 베트남·예멘·독일 통일사례연구, 특히 흡수통일모델로서의 독일통일 연구, 중국의 개혁개방연구 등<sup>9)</sup>이었다. 그런데 1998년 대북 ‘포용’ 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통일학’의 주제도 크게 변화하였다. 북한 ‘붕괴임박’론과 ‘흡수통일’론 대신에, ‘장기존속’론과 함께, ‘남북한은 화해·협력 과정을 유지하면서,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루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이 ‘통일학’의 주요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연세대 통일학 과정의 교육목표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이를 보여준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완화는 21세기 들어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및 경제협력 등 상호 화해협력추진에 따라 이제 통일은 막연한 기대와 전망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sup>10)</sup>

7)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토통일원은 통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관계 각부의 총괄·조정기능을 부여받았다.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통일부, 1999), p. 392.

8) 대표적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1996);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공편,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전현준, “김정일 정권 초기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전쟁/북한 학술토론회』 (1997년 3월).

9) 통일연구원의 1991~1998년간 연구주제목록 참조.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15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76-82.

10) <http://suny.yonsei.ac.kr/~ikus/main.html>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일학’은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08~2012년 동안 한국을 이끌어갈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1998~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정부의 주도하에 주류담론으로 정착했던 주요 명제를 부정하는 우파쪽 세력<sup>11)</sup>이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주요 명제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김정일 정권은 안정되어 있고, 한국은 북한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큰 기여를 했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은 앞으로 크게 확대발전할 것이다,’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는 동등하게 중요하거나, 또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식량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견지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확대론이 ‘통일학’의 주류담론으로 설정되는 가운데, 1994~1997년間に 유행했던 급변사태론이나 흡수통일론과 같은 발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새로운 주류가 된 우파적 인식은 지난 10년간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포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이바지했다는 것, 북한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등에 기초한다.<sup>12)</sup> 또한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보면 예측을 뛰어넘는 급변사태로 발전할 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sup>13)</sup>는 인식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통일비용’이 무섭다고 통일을 두

11) 대표적으로, 한반도 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패널 편,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 (한반도 선진화재단, 2007).

12) 이명박 외신기자클럽 연설, 2007년 1월 22일.

13)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7), p. 8.

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14)</sup>

## Ⅱ. ‘통일학’의 세 가지 특징

‘통일학’의 개념과 주제 변천의 역사에서 ‘통일학’의 세 가지 특징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통일학’은 미래연구라는 것이다. 둘째, ‘통일학’은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한다. 셋째, ‘통일학’은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상호 대립적인 인식과 태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먼저 ‘통일학’이 미래연구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은 미래 또는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의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 중의 하나는 ‘사례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독일통일 사례연구,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연구, 소련·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 독일·베트남·예멘 통일 비교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통일’ 사례연구의 목적은 대체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 또는 북한이 체제변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즉 아직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떠한가를 밝히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독일의 동방정책 사례연구, 중국 대만관계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북포용정책을 수행 또는 남북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sup>14)</sup> 한반도 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패널 편,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07), pp. 43~44.

그런데 그간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건 데, 이러한 사례연구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우선 이러한 연구는 매우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수행되는 연구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연구당사자 그리고 우리사회전반의 사례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은, 연구자의 선행적 인식 및 질문 구조, 바람직한 예상 정답에 맞게 연구대상이 편의적으로 재구성되고, 결국에는 연구자의 선행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3~1997년 동안에는 독일통일 등 통일사례연구가 주요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는 당시에 지배적이던 ‘북한붕괴박두’론과 ‘흡수통일 가능’론의 영향 때문에 주요 연구주제로 간주되었다. 역으로 이러한 사례연구는 ‘붕괴’ 및 ‘흡수통일’이 발생 및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8~2002년간에는 사례연구의 주요주제가, 서독의 동방정책, 중국 대만 양안관계,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이 시기 지배적이던 북한변화론과 대북포용정책론에 의해 영향 받았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범으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포용정책 또는 그 일부조치에 대한 국내정치적 반대를 설득할 때 자주 등장하던 모범사례였다. 또한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로는 북한변화의 전범 또는 북한이 불가피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북 정책입장이 정당화된다는 식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동원되었다.

여기서 확실해지는 것은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주요 사례의 선택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당시 지배적인, 또는 보다 정확히 당시 진보 또는 보수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두 개의 대립적 인식(예를 들어 북한붕괴론 대 북한변화존속론) 중에서 지배적인 인식만이 그때그때 ‘통일학’계의 화두가 되고, 다른 나머지는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정



책과의 연동, 그리고 열세 인식론적 입장의 배제는, ‘통일학’ 연구가 유행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때문에, 미래를 한 가지 관점에서, 또한 낙관의 수준을 넘어 장밋빛으로만 상정하고 정책방향과 홍보논리가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식 미래(official future)”이다. 이러한 경우, 사태가 만약 공식미래와 달리 전개되는 경우, 정책대응과 홍보논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진보 보수를 상관하지 않고, 정부 출범 당시에는 종합적 사태전개가 매우 낙관적으로 흘러갈 때만 타당성을 갖는 정책 방향과 설득(홍보)논리가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으로 제시되곤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2001년 부시정부 출범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출범 당시부터 2차 핵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가 조속하고 쉽게 해결되어야만 타당한 ‘평화변영정책’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역시 비핵화가 조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공에 뜨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의 정책과 국민에 대한 홍보논리가, 복수의 상황전개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정치적 물질적 비용 절약 뿐 아니라, 상황선취와 선제대응으로 인한 추가이익까지 가능했었을 수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시사되었듯이, 통일학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하는 학문분야이고, 이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불확실성은 북한이 앞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불안정상태에 빠질 것인가이다. 이는 1990년대 경제난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요사이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올해(2009)에 67세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나아

가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고, 그에 따라 집권하게 되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북정책과 국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진다. 1994년 핵 위기 시에는 미국의 영변에 대한 폭격과 그에 따른 전쟁발발 위협이 존재했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그것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초래할 변화에 대해 각 국가의 의구심과 대비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래통일까지의 도정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고, 그 변수의 여러 조합 역시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국에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시기별로 지배적 견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어느 한 시기 동안에는 특정 시나리오가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명한 것은 어떠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통일학’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집합의 구조와 초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단지 진보 또는 보수로의 집권세력의 변화에 따른 지배담론의 변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일학’이 ‘학문’이라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학’은 이른바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영향권 하에 들어서 있다. 남북분단이후, 주요 쟁점과 갈등의 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지만, 탈냉전이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도,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애석한 것은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북한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안정과 붕괴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현재 김정일은 건강한가 아닌가, 북한은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 등 일견 비정치적 관찰과 판단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연구자의 진보 또는 보수의 정치적 편견

15) 박형중 외, 『대북포용정책과 국내정치 여건조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우선 ‘남남갈등’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사회 내의 정책적 정서적 갈등을 둘러싼 정치경쟁이 공개적으로 가능해지고 또한 공식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남갈등’은 대북통일에 관한 사회 내의 정치적 토론뿐 아니라 비정치적 연구에도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 편파성의 이분법적 잣대가 스며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학의 일부가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진보 또는 보수라는 세력 규합과 유지에 적합한 정치적 ‘공격’과 ‘방어’라는 차원에서 수행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실제로 ‘통일학’ 문제집합의 구조와 초점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상당히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각 정부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보와 해설의 생산과 유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 Ⅲ. 통일학 연구에 시나리오 기법의 도입

앞에서 ‘통일학’은 미래연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내포, 논쟁적이고 갈등적 주제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통일학’이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불확실성을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준에서 고려하며, 갈등 조장 보다는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일학’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나리오 기법이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이 ‘통일

학' 연구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한다. 시나리오란, 미래의 환경이 우리의 조직, 이슈, 국가, 또는 세계와 관련한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stories)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다. 예측은 뚜렷한 추세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이 개입할 개연성이 낮은 사항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시나리오란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미래가 복잡적이고 불확정일 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도발적이고 그럴듯한 묘사이다."<sup>16)</sup> 시나리오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환경은 여러 복잡적 요소들의 작용 때문에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그 다양한 미래를 탐험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써, 그에 함축되어 있는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게 해준다. 나아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 부정적, 예측불가적 다양한 미래 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다양한 가능한 미래들 속에서 우리가 현재 견지하는 전략, 변화이론, 또는 비전이 과연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sup>17)</sup>

그런데 좋은 시나리오란 사후적으로 볼 때 미래를 정말로 정확히 묘사했다고 판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해당 조직의 학습, 적응, 효율적 행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시나리오이다.<sup>18)</sup>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정확성 보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냄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조직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주목되어야 할 문제가 주목되었는가를 판단

16) 마츠 린드그렌·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서울: 필맥, 2005), p. 50.

17) Global Business Network, "Overview of Scenario Thinking Concepts", p. 1.  
www.gbn.com/whatif

18) Kees van der Heijden, *The Sixth Sense: Accelerating Organizational Learning with Scenarios* (London: John Wiley & Sons, LTD., 2002).

하는 것이다.<sup>19)</sup> 그래야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화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추진 가능한 탄력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sup>20)</sup> 또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시각들이 시나리오 작성과정을 매개로 —그렇지 않았으면 용이하지 않았을— 전략적인 대화과정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는 또한 시나리오 작성과정은 공동체 내에 미래전략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촉진하고, 여러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며 그에 비추어 현재의 조직의 준비나 전략을 공동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미래 준비와 지향에서 공동인식의 폭을 넓히고 확산시킬 수 있다.<sup>21)</sup> 요약하면,

시나리오 기법은 광범한 분야와 전공을 포괄하는 협동적 방법으로서, 단순한 토론 이상의 것이다. 단 하나의 정책방안을 고집하는 대신에, 시나리오 기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sup>22)</sup>

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sup>23)</sup>의 첫째 단계는 해명되어야 할 주제 또는 질문을 정하

19) 린드그렌·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p. 53.

20) Miranda Weingartner,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M. Martellini and R. Redaelli, *Cooperativ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latest Round of the 6-Party Talk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mo, Italy: 26 March 2007), p. 164.

21) Kees van der Heijden,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London: John Wiley & Sons, 1996).

22) Weingartner,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p. 168.

23) 시나리오 작성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로 Diana Scarsee, Katherine Fulton, *What If? The Art of Scenario Thinking for Nonprofits* (Global Business Network, 2004), pp. 24~34, (<http://www.gbn.com/ArticleDisplayServlet.srv?aid=32655>)

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한 주요 전문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는 워크숍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워크숍은 전략적 대화의 활성화와 합의 형성을 위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 이해당사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통일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양상과 통일학의 관계를 검토한다'라는 설정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가능한 여러 '통일의 양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에 기초하여 그 양상과 통일학의 관계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계는 관심 주제에 대한 '추동요소(driving forces)'를 찾아내는 것이다. 통일의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추동 요소는 고정요소와 불확실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요소는 관심 시간대에는 대체로 변하지 않을 요소이다. 불확실요소는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추동요소이다. 다양한 불확실 요소 중에서 '핵심적 불확실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견된 불확실요소들을 비슷한 것들 끼리 분류, 상호인과관계 추적 등을 통해 분석하여, 개수를 줄인다. 그리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요소, 다시 말해 '핵심적 불확실성'을 찾아낸다. 대개의 경우, 핵심적 불확실성(핵심변수)을 두 개 정도로 압축한다.

셋째 단계는 추출된 두 개의 핵심적 불확실성 요소를 사용하여, 2×2의 4가지 경우의 수에 바탕을 둔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통일의 양상을 결정짓는데서 핵심변수로서, 북한의 안정 불안정 여부와 동북아 국가들(한·미·중·일) 관계

---

참조. 이밖에도 마츠 린드그렌·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피터 슈워츠, 『미래를 읽는 기술』(서울: 비즈니스북스, 2007); 최항섭 외,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최항섭 외,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참조.

의 협조 또는 갈등 여부가 설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안정 대 불안정, 협조 대 갈등을 조합하면, 4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틀을 기초로 ‘통일’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가지 양상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를 쓴다. 각 줄거리마다 식별을 위해 눈에 띄고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을 붙여준다.

넷째 단계는 작성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행동을 기획하고 행하는 단계이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약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미래에 현실이 될 경우가 현재의 행위자에게 주는 함축의미를 찾아내어야 한다. 즉, 개별 시나리오가 (좋은 미래일 경우) 실지로 실현되는 것을 촉진 또는 (나쁜 미래일 경우) 방해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또는 조직이 견지하고 있는 현재의 전략적 입장이 지속될 경우, 미래 시나리오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숙고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는 모니터링의 단계이다. 해당 주제 또는 질문과 관련된 여러 추동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어떠한 추세를 형성하는가를 관찰해가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어떤 특정 시나리오로 미래가 전개될 것 또는 중대한 변화나 전환의 발생을 시사해주는 몇 개의 ‘주요지표(leading indicators)’들을 설정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 IV. 통일 관련 4가지 시나리오

통일학의 많은 주제는 미래연구, 불확실요소, 갈등적 인식이라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기법은 활용의 여지가 높다.<sup>24)</sup>

여기서는 주제가 통일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법이 통일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질문을 설정한다. 여기서의 질문은 ‘통일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양상과 통일학의 관계를 검토한다’이다. 이에 맞추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가능한 ‘통일의 양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찾아본다. 위에서 서술한 시나리오 작성 순서에 따르면,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통일의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두 개의 핵심 변수로 압축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약식으로 통일의 양상을 결정짓는데서 핵심변수로서, 북한의 안정 불안정 여부와 동북아 국가들(한·미·중·일) 관계의 협조 또는 갈등 여부를 설정한다.

설정한 이유는,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의 취약성 때문이고, 그러한 북한의 안정과 불안정여부에 의해 통일과정의 양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적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일이 발생할 당시 동북아 국가들(미·중·일)의 관계가 협조적이나 갈등적이나 하는 여부가 통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가장 핵심적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권력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그런데 통일발생 당시 국가들 간의 관계가 갈등적인 경우, 남북통일은 동북아에서의 국가간 또는 진영간 대립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통합과정에 현저한

---

24) 여기서 소개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한반도 관련 연구로 다음을 참조. Nautilus Institut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Engagement, Containment, or Rollback?” Nautilus Institute (August 2002) ; Nautilus Institute, “A Korean Krakatoa? Scenario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autilus Institute (August 2003) ; Nautilus Institute, *Who Will Stop Nuclear Next Use?* (April 27~28, 2004) ; Weingartner,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pp. 161~172.



장애와 적극적 방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역으로 통일발생 당시 국가들 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경우, 남북통일은 국가들 간의 협조와 균형을 해치는 않는 틀과 방식으로 발생하도록 조정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한 통합과정은 주변국가의 협조 속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핵심변수를 기초로 4가지 시나리오의 기본구도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안정과 동북아 국가간에 협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통일을 성취하는데, 여기에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협조한다는 시나리오다. 셋째 시나리오는 북한도 불안정하고 주변국들 간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주변국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된 북한이 한국과 통일을 이루는 경우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붙여 나타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통일양상의 두 핵심 변수와 네 가지 통일 시나리오

	한국의 대 주변국 관계: 협조적	갈등적
북한 안정 속 변화	공존공영의 동북아 중심시대	축복받지 않은 결혼
북한 불안정	돌풍 후의 고진감래	상처뿐인 영광

다음단계는 4개의 기본구도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존공영의 동북아 중심 시대 개막’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 점진적 자유화와 국제체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과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경제·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통일을 성취한다.

북한의 이러한 발전 경로는 한·미·중·일 모든 주변 국가의 각광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변화가 수반하는 내부 불안정 요인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이전과 과정에서의 북·일 수교와 협력, 북·중 경제협력은 한국 주도의 통일노력과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하는 가운데 미·중·일의 협조 속에서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도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미·중·일 관계가 안정되는 가운데, 남북통일로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동북아 전체는 공존공영을 구가하면서, 전지구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변국 관계가 안정된 가운데, 불안정한 북한과 한국이 통일하는 경우이다. 이는 ‘돌풍 후의 고진감래’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북한은 상당한 잠재 불안요인을 내장하고 있으며, 그 불안요인의 결합양상, 억압과 발현의 수준이 상황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개혁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내부에서 정권과 사회간 긴장의 수압(水壓)은 점증하다가 어떤 계기로 점차 또는 급작스럽게 폭발할 수 있다. 또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정권과 사회간 긴장 처리 양상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의 불안정은 내란에 의한 대량 살육과 인도주의 위기, 난민대량 유출, 마약거래·위폐유통·인신매매 등 불법활동의 급증, 북한 대내외에서 군사충돌 발생,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외부 군사개입, 주변국간의 경계와 불신 증가 등 다양한 위험을 생산해 낼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지만, ‘급변사태’를 통해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다. 만약 한·미·일·중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북한 불안정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동의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변화

와 통일은 급속하며 단기적으로 자원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만으로 북한 불안정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며, 일정 시기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안정화 사업은 주변 국가의 조율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과 동북아가 동시에 불안정에 빠지는 가운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는 '상치뿐인 영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기본 원인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동일할 것이지만, 주변국의 갈등이 그를 더욱 조장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불안정해지면서 모든 주변국은 다른 어떤 주변국이 자신의 대북영향력 기회로 활용할 것에 대해 경계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측이 북한 내부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주려는 개입 징후를 보이는 경우, 다른 측은 그에 상쇄하기 위한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에 두 개 이상의 주변 국가 군대가 진주하여 장기 주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권력 경쟁이나 상황은 악화·복잡·격렬·장기화할 수 있다. 한국은 외부개입 때문에 더욱 피해하고 내부 상처가 깊은 북한을 인수하게 될 것이며 이를 재건하는데서 주변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충분한 외부 협조를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통일시도는 어떤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과 방해에 직면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국가집단간의 경쟁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통일이 야기한 경제부담 등 여러 문제를 둘러싼 남한의 내부갈등이 증폭될 뿐 아니라, 북한 재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북측과 남측간의 갈등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통일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내부는 통일의 여러 충격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내부분열과 장기 사회경제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통일은 다소간 동북아 모든 국가와 다

수의 주민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안정된 가운데 한국과 통일을 이룩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이다. 이는 ‘축복받지 않은 결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미·중·일 관계가 갈등과 불신으로 특징 지워져 있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화해협력을 깊여 가는 경우,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긴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통일한국이 어느 국가와 친하게 또는 어느 국가와 적대하는가에 따라 동북아 국제적 세력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아마도 통일한국이 강한 반일주의적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반일본적이며 그리하여 결국에 친중국 경향을 띠게 될 것이라면, 이는 일본에게 매우 심대한 사안이고, 일본을 동북아의 중추적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에게도 역시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 그리고 미국은 남북한 통일의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도록 개입하거나 방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한국이 반드시 반일적이 될 것이라는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민족주의적인 통일한국은 반중국 적일 수도 있고, 반미성향을 띠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반중, 반미, 반일의 모든 성향을 표출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통일 한국의 향배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세력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경쟁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일과정은 어느 한 쪽의 협조 또는 다른 쪽의 방해에 직면하게 된다. 자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과정은 성공(=북한의 재건과 안정화, 통일 한국의 안정과 번영,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내부가 한국의 대외지향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해양세력’ 또는 ‘대륙세력’ 어느 쪽을 동맹으로 삼아야 하는가? 자명한 것은 중국(의 지지와 시장)이든지 미·일(의 지지와 시장)이든지 그 어느 쪽을 상실하는 경우, 통일 한국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가 붕괴되며, 동북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성공적 재건과 안정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통일이한국이 번영을 누리면서 존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통일이한국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한편, 다른 측의 불신과 경계를 높여주게 되며, 어느 한 세력의 다른 세력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이용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통일이국국의 내부 상황은 대외지향 문제와 악화되는 경제사회문제로 정치적 내부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퇴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다.

## V. 통일 시나리오의 시사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4가지 시나리오가 현재의 '통일학'에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공존공영' 시나리오, 다음으로 '돌풍 후의 고진감래,' 다음은 '축복받지 않은 결혼'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처뿐인 영광'의 시나리오다. 어느 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한국의 역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넘어가는,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국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최선의 방책은 한국의 힘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한국의 직면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확실성에서는 부정성을 최소화하고, 긍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찾는 방향으로 전략 사고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 시나리오가 현재의 우리의 '통일학'에 제기하는 문제들을 고찰해 본다.

먼저 '공존공영' 시나리오다. '통일'에 관한 한국의 주류 공식 담론 또는 정부의 공식 담론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정한다. 이는 좌든 우든 차이

가 없다. 다시 말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든, ‘통일’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로의 진입 관문을 뜻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실제로, 1998~2000(2002)년까지는 북한 내부 변화,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이 시나리오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98년에 개시된 페리프로세스,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북미,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 2000~2002년에 나타난 북한 내부의 ‘개혁 지향적 변화’ 등을 볼 때 그러하다. 이 시기까지도 중국은 대체로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던 한편, 한·미·일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고 협조적이었다. 이 구도는 2001년 부시 정부의 등장과 9.11 발생에 의해 흔들리기는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의 북한의 7월 개혁, 9월 북일 정상회담 개최, 미국 내부의 정책 갈등 등 여전히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 발생에 의해 파탄 났다. 물론 ‘공존공영’ 시나리오가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2009년도 전반기의 시점에서 미래를 볼 때, 당분간 재도래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2009년 1월 북한은 핵 보유에 집착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2006년 이래 보수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셋째, 북한은 2008년 3월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적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반도의 정세는 ‘공존공영’ 시나리오의 현실화 방향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일에 관한 공식담론의 근간이 되는 ‘공존공영’ 시나리오에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취약점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당국의 의도·주변국의 의도에 대한 선의적(또는 안이한) 해석, 북한의 변화 능력·주변환경추세·한국의 상황 주도능력에 대한 대체로 낙관론에 입각한다. 안이와 낙관이 지나치면, 상황의 변화 또는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거나 또는 반대증거의 대두에 둔감할 수 있다. 여기

에 더하여 특히 상황주도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아도취적 낙관론에 빠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의 실패에 나타났던 바와 같은 부시 정부의 대두와 성격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초기 인식과 대응이다.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잠복하는 여러 문제(북한의 긍정적 변화의 속도, 북미·북일관계 개선의 속도, 북한의 의도, 남한 내부 설득능력)에 잠복하는 어려움에 대한 과소평가, 불확실성과 돌발변수(미국의 정책 변화의 깊이와 강도, 9.11 발발과 대테러전쟁의 개시 등)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비핵개방 3000’론에도 숨어 있다. ‘비핵개방’의 과정이 5년 이상을 넘어가면, 이는 5년 임기 정부의 현실적 비전은 아니며, 또한 ‘비핵개방’ 이후 연속 10~20%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10년 내에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실현시키려면, 모든 환경요인이 10년 이상 긍정적인 방향에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돌풍 후 고진감래’ 시나리오는, 1993~1997년 김영삼 정부 시기의 상황 추세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간에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북한붕괴박두’론이 우세했고, 따라서 그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도상 연습이 행해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은 동북아에서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북중 관계는 소원했고, 중국은 한국경제를 따라 배우기 위한 모델로 보고 있었으며, 한반도 통일의 주역을 당연히 한국으로 간주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한 핵 문제 처리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북한의 고립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제로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주변국들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한미 주도하에 협조로 상황이 관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이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북한붕괴박두’론에 주로 집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한국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자신의 ‘흡수’ 통일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여파였던 대북정책에서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1998년 금융위기의 발발은 다음 정권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0년 동안은 ‘북한 존속’론, 또는 ‘북한 존속 지원’론이 대북정책의 중심사고가 되는 가운데, ‘급변사태 대비’론은 ‘공존공영’론의 비상 대책으로서의 대접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세 번째 ‘상처뿐인 영광’과 네 번째 ‘축복받지 않는 결혼’은 모두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통일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그다지 거론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통일론은 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규범적 담론과 행동지침으로 전개되는데,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분열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보다는 ‘주변국을 적극 설득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설정된다. 또는 ‘통일성공’이라는 담론 목표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속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 번째 ‘상처뿐인 영광’의 시나리오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는 상정되지 않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개연성있는 시나리오이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발굴해 내어 환기시켜주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인 ‘축복받지 않는 결혼’으로 향하는 추세는 2003~2005(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의 상황 추세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미국 및 일본과 갈등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에 불구하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국제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것을 판단되기도 했다.



동시에 이 시기 동안, 한국·중국·일본에서 동시에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 또한 일방주의적 군사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그리고 중일관계가 동시에 악화되었다. 대북 정책을 놓고는 한·중 대 미·일, 역사·영토 문제를 놓고는 한·중 대 일(·미<sup>25)</sup>)의 구도가 대치했다. 1992년 국교수립 후 순항하던 한중관계에 '동북공정'에 의해 역사·영토문제가 대두했다.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화해협력 정책을 바꾸지 않았음으로써, 중국의 강경한 대북입장과는 대비를 보이게 되었다. 2007년 2.13 합의에 의해 북미협상이 전개됨으로써, 한미간 대북정책 견해차이가 현저히 축소된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우선주의 등으로, 비핵화의 진전보다 한 걸음 앞서는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가 정책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또한 반일·반미 혐의를 받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노선은 주변국가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하는 '공존공영' 노선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정책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 고립된 한국의 대북협상력은 현저히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노선에 잠복해 있는 여러 정책적 약점이 보다 현저하게 노출된다. 또한 주변국가와 갈등을 감수하지만, 주변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충수적인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국가들과 갈등하는 속에서 보다 편협한 민족주의적 대외 자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미국의 여러 요구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sup>25)</sup> 미국이 일본 우파 정부의 영토·역사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부는 일본 우파 정부의 외교·군사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으며,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중적 자세를 보였다.

시나리오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모니터링의 단계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에 발생할 추세는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떠한 것과 가장 근접할까? 먼저 주변 정세를 보면, 한·미·중·일 관계는 당분간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비핵화와 관련하여 공동 이해와 보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한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변수는 북한의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떤 추세 갈 것인가를 모니터링하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조속히 핵무기 포기에 명확한 자세, 한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생산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보여준다면, 이명박 정부의 공식 담론인 ‘비핵개방 3000’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존공영’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여 준다면,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권과 주민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황의 추세가 ‘돌풍 후의 고진감래’에 근접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 VI. 결론

통일학이란,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개별학문적 그리고 학제적 연구들의 총체를 지칭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통일학의 주요한 문제의식과 주제구성, 그리고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통일학의 주요 초점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통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연구, 불확실성 처리, 상호 대립적 인식

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시나리오는 다양한 불확실 요소 때문에 미래가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일 때, 그 미래를 탐험함으로써 기회와 위험을 평가해보고, 그에 따라 현재의 전략과 비전을 검토하고 공통의 인식을 확대하는 기법이다.

통일학의 많은 주제가 미래연구, 불확실성, 인식갈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 여지가 많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일양상과 통일학에 적용해보면, 4가지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공존공영’의 시나리오으로써, 북한의 안정과 동북아 국가간에 협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돌풍 후의 고진감래’로써, 한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통일을 성취하는데, 여기에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협조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두 가지 경우 통일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셋째는 ‘상처뿐인 영광’으로써, 북한도 불안정하고 주변국들 간에도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은 통일 한국의 불안정과 동북아 갈등 격화를 결과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주변국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하지만, 주변국가의 견제 때문에 성공적 통합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이다.

통일학의 문제의식과 주제구성은 위의 어떠한 시나리오에 가까운 추세가 전개되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화해 왔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학의 전략적 지향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종합적 구성과 방향이 위에서 언급된 어느 시나리오 추세에 가깝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어느 추세가 유력한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각 시나리오 상황에 유효하고 대응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그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일요소라도 상황에 따라 그 비중과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것은 모든 상황에 유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을 수 있다. 이처럼 ‘통일’과정의 유형별 식별을 통해, 이제까지 ‘통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어온 여러 연구들을 상황적합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화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연구의 문제인식과 연구 방향이 각 상황유형마다 얼마나 유효하게 동원될 수 있는가, 또는 상황에 따라 기존 연구들의 문제인식과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가, 또는 아직까지 인식지평에 떠오르지 않았던 연구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을 식별해 낼 수 있다.

■ 접수: 2009년 4월 24일 / 수정: 2009년 5월 22일 / 게재확정: 2009년 5월 25일

###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15년 약사(1969년~1984년)』, 서울: 국토통일원, 1984.
- 마츠 린드그렌 · 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서울: 필맥, 2005.
-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7.
- 박형중 외, 『대북포용정책과 국내정치 여건조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전현준, “김정일 정권 조기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전쟁/북한 학술토론회』 (1997년 3월).
- 최항섭 외,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최항섭 외,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15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평화 · 화해 · 협력의 발자취 1969~1999』, 서울: 통일부, 1999.
- 피터 슈워츠, 『미래를 읽는 기술』,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7.
-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공편,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 한반도 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패널 편,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헛 별정책에 의한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 한반도 선진화재단, 2007.
- Heijden, Kees van der,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London: John Wiley & Sons, 1996.
- Heijden, Kees van der, *The Sixth Sense: Accelerating Organizational Learning with Scenarios*, London: John Wiley & Sons, LTD., 2002.
- Nautilus Institute, “A Korean Krakatoa? Scenario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autilus Institute, August 2003.
- Nautilus Institut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Engagement, Containment, or Rollback?”, Nautilus Institute, August 2002.
- Nautilus Institute, *Who Will Stop Nuclear Next Use? 27~28 April*, 2004.
- Weingartner, Miranda,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M. Martellini and R. Redaelli, *Cooperativ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latest Round of the 6-Party Talk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mo, Italy: 26 March, 2007.

이명박 외신기자클럽 연설. 2007년 1월 22일.

한국정치학회 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1996.

Global Business Network, “Overview of Scenario Thinking Concepts”.

〈[www.gbn.com/whatif](http://www.gbn.com/whatif)〉.

Scarce, Diana and Katherine Fulton, “What If? The Art of Scenario Thinking for Nonprofits”, Global Business Network 2004.

〈<http://www.gbn.com/ArticleDisplayServlet.srv?aid=32655>〉.

〈<http://suny.yonsei.ac.kr/~ikus/main.html>〉.

〈<http://tongil.snu.ac.kr/business/basic.php>〉.

〈<http://tongil.snu.ac.kr/info/object.php>〉.

Abstract

## Unification Studies and Scenario Planning

Park, Hyeong-jung(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Unification studies are a kind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sui generis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They are not static, but dynamic in the sense that their main focus and combination and hierarchy of major subjects have been changing. There can not be the universal method for this kind of discipline. Scenario planning could be useful, though,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as future studies and their dealing of uncertainties and conflicting opinions. It is applied here and four scenarios for unification and unification studies are suggested.

**Keywords:** unification studies, future studies, North Korea policy, unification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South-South conflict on North Korea policy

**박형중** .....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체제변화』 등이 있다.